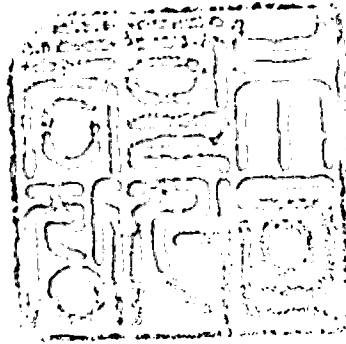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1999. 12.



통 일 부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is a title page, which includes the title, author, and date.

목 차

I.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1. 통일교육의 정의 · 9
2. 통일교육의 목표 · 9
3. 통일교육의 과제 · 9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당위성 인식 · 13
 - 1.1 통일의 의미와 성격 · 13
 - 1.2 분단의 배경과 폐해 · 15
 - 1.3 평화통일의 필요성 · 18
2. 북한문제의 올바른 이해 · 21
 - 2.1 북한체제의 특징 · 22
 - 2.2 북한의 현실 : 위기의 심화 · 23
 - 2.3 북한위기의 대응방식과 한계 · 25
 - 2.4 북한체제의 내구력 · 27
 - 2.5 북한의 변화가능성 · 30
 - 2.6 북한의 대남전략 · 32
 - 2.7 북한의 대외정책 · 34

- 3. 통일환경의 변화 · 35
 - 3.1 국제질서의 변화 · 36
 - 3.2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 37
 - 3.3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 39
 - 3.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40

- 4.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 42
 - 4.1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 42
 - 4.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길 · 43
 - 4.3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 45

- 5.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 47
 - 5.1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 47
 - 5.2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원칙과 기초 · 48
 - 5.3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 50
 - 5.4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방향 · 52
 - 5.5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 55

- 6. 통일한국의 실현 · 56
 - 6.1 분단국 통일의 교훈 · 56
 - 6.2 통일의 촉진 · 장애요인 · 57
 - 6.3 통일의 경로 · 59
 - 6.4 통일한국의 미래상 · 62

- 7.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63
 - 7.1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 63
 - 7.2 민주복지사회 구현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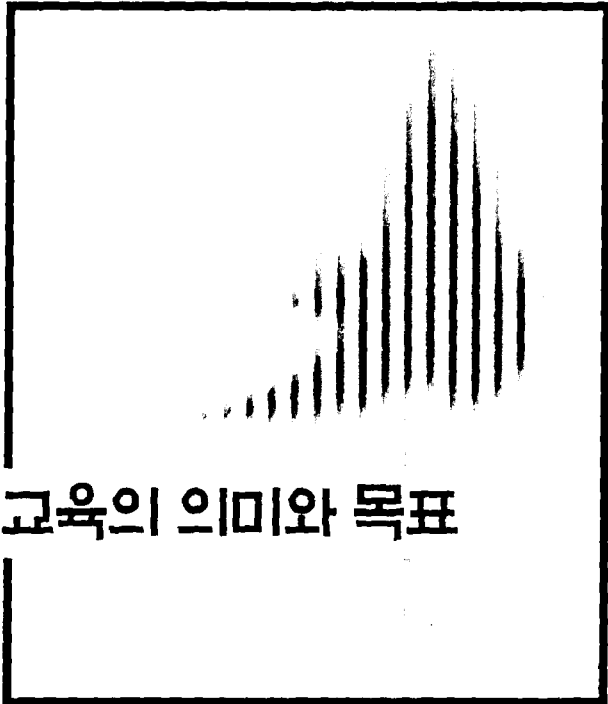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 69
 - 1.1 객관적 사실의 전달 · 69
 -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 71
 - 1.3 각종 교육기법의 활용 · 73
 - 1.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논의 · 80
 -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 84
 - 1.6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 85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 88
 - 2.1 공통원칙 · 88
 - 2.2 학교통일교육의 지도원칙 · 91
 - 2.3 사회통일교육의 지도원칙 · 95

부 록

1.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 101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 106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09
4. 현장 통일교육 안내 · 110
5. 대북정책 해설자료 · 120
6.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 121



1.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I.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1.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통일교육의 목표

- 1)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 2)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정립
- 3)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

3.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의지의 고취

통일교육은 분단의 배경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국민들이 통일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형성 의지 고취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분단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민족동질성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확대하여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할 준비를 갖추도록 실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교육은 오늘날 북한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원인과 그 현실을 이해시키고 북한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능력과 함께 그들과 화해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평화 의지의 함양

통일교육은 객관적 정보전달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남북한 화해·협력 관계 형성에 필요한 준비

통일교육은 현재 남북한 관계에 내재해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평화, 화해, 공존, 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완전통일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준비태세 배양

통일교육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과제를 예견하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에 대해 명확한 전망과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실시해야 한다.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당위성 인식

1.1 통일의 의미와 성격

가. 통일의 의미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낮은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률적·제도적 분단상태에서도 평화정착,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하면 사실상의 통일이 가능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남북한은 국가적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통일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을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창조 작업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된다. 국가와 제도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통일상태를 '실현',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일을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몇 % 달성되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낮은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은 평화정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이질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두터운 연계에 의해 민족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설령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달성한 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완전한 통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보다 결합정도가 낮은 통일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낮은 결합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한다.

둘째, 설령 국가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를 통해서 평화정착을 실현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문제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냉전이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4강은 한반도 문제에 끊임 없이 개입해 왔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

제문제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민족내부의 문제이자, 국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주요 관심과 남한의 주요 관심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와 주변국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궁극적인 통일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주변국가들에게 잘 이해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이익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합리성을 인정하여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 나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대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문제가 지닌 민족내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이중성을 설명한다.

둘째, 통일을 성취하는데 있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 못지 않게 주변국을 꾸준히 설득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1.2. 분단의 배경과 폐해

가.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분열에 의해 분단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분단은 중첩적으로 누적되어 하나의 공고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분단 극복 노력은 남북간의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분단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적 분할 점령으로 시작된 분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된 조국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두 체제로 갈라놓았다.

오늘날 분단은 단순한 남북한의 양분상태라는 의미로부터 이러한 양분이 낳은 여러 분열적 양상과 한반도 상황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분단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에 따라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탁통치 논쟁을 계기로 계급적·이념적 분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이 1946년 2월부터 시작한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등 제반 개혁조치 등 체제상의 분단을 심화시켰으며 1948년에는 두 개의 상이한 성격의 정권 분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중첩된 분단 위에 문화적 분단이 더해졌으며, 6.25전쟁으로 분단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분단이 이렇게 복잡한 중층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단의 해소인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늘날 분단은 다음과 같은 3개의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분열된 두 주권국가의 존재로 상징되는 '지역적 분단'이다. 둘째,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구성체의 분열적 존립'이다. 즉, 남북한에는 지금 경제적 양식에서 정치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모습을 띤 두 개의 생활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셋째, 분단이 우리에게 항상 위협적 존재로 대두되는 직접적인 이유인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적대성'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래되었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먼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길이 분단을 극복하는 지름길임을 인식시킨다.

둘째, 분단에 내재된 3요소를 설명하고, 그 중 적대성을 해소하여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나.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부과하며,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주민간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물론 체제경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 왔다. 남북한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며 평화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막았다. 또한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있게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으로 인한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로 보다 빠른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분단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의 우리 삶을 왜곡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이 비용은 엄청나다. '분단비용'이란 통일상황과 비교할 때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국방비 등과 같이 계산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영향을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분단 해소 과정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다.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 비용이 제로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곧 통일실현을 의미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결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가 21세기의 정보화·지식산업화시대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동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1.3 평화통일의 필요성

가. 평화정착의 필요성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내재한 남북한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통일에 앞서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평화정착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마 우리가 현재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미래의 일이며, 당면한 과제는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평화정착단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단에 내재한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호전성, 도발 욕구는 모두 이 적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시키고,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기본합의 내용들이 성실히 준수되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평화정착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상황은 정치·군사적으로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가 실현되며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쟁관계가 구축되고, 남

북한의 주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적대성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관계는 통일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다. 통일과정은 평화·공존·협력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

통일은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달성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나 앞으로는 이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족공동체를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구체적으로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미래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and 상봉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단은 남북한 주민을 상이한 체제로 분리하고 교류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민족의 이질화를 초래하고 있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 완성된다.

셋째, 분단은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여 민족 역량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현상은 남북한 양쪽에 모두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전쟁위협 요인이 해소된다는 뜻이 된다.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둘째, 통일한국은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강화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단 상태에서 이룩한 우리의 경제발전의 저력과 민주주의 역량이 통일국가의 실현을 계기로 국가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던져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 북한문제의 올바른 이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적대적인 한 축을 이루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하고, 또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이해없이 우리가 평화정착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과 평화공존하려면 북한의 현실과 진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들의 의중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 형제인가?’ 우리는 이 어려운 물음에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은 우리의 ‘적대적인 형제’로 규정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와 실제 적대관계에 있으며, 우리를 파괴할 군사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우리의 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함께 통일공동체를 실현해 가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형제임에도 틀림없다. 결국 적과 형제라는 이중적 현실인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성을 감소시켜가며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1 북한체제의 특징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이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공산당 독재로 나타난다. 그리고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일체제라는 특징을 지니며, 최근에는 군사국가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공산당 독재로 나타난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과 가치법칙의 작용에 기초하여 빈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계급분화를 가져오게 한다'며 부정하고 있다. 대신에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키며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초'라며 고수하고 있다.

공산당 독재는 해방 후 이른바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서 유일적인 지배정당인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 아래 전체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은 공산당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극심한 개인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징을 유일체제라고 한다.

유일체제는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체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최고지도자 일인의 권력집중이 어느 체제보다도 강도높게 나타난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도로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체제이다. 셋째, 문화적으로 전면적이고 광범한 개인숭배 현상을 동반한다.

김일성 사망 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체제는 급격히 군사국가화되는 새로운 특징을 보여왔다. 군사국가란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 경제 전반에서 국가운영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의 성격을 특징화한 말이다. 이 군사국가는 오늘날 김정일이 위기의 북한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군사국가는 북한이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유일한 가용자원인 군을 국가 생존을 위해 활용하면서 부각된 국가성격인 것이다.

군사국가는 사회체제의 동원화와 일상화된 부대의식(部隊儀式)을 바탕으로 성립하

는 병영국가의 성격 위에 군대가 제반 비국방분야의 운용에도 직접 나선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군대가 인프라건설의 핵심노동력으로 나서고 군의 사업방식을 모범적인 전형으로 부각하여 전체사회에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종 부진한 농업생산력 회복을 목적으로 농장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즉, 군이 국방 수호자의 수준을 넘어 '사회주의 북한'을 수호하고 난국을 개척하는 수문장, 개척자의 역할을 겸임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는 군사국가인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특징인 사회주의적 성격을 설명한다. 둘째, 김일성-김정일 절대권력체제를 뜻하는 유일체제를 설명하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군사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시킨다.

2.2 북한의 현실: 위기의 심화

현재 북한사회는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외교고립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내부경제자원의 고갈로 표현되는 경제난은 광범한 체제 이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의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유일체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권 몰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되어 경제난이 심화되었으며, 사회주의권 몰락과 한소·한중수교 이후 심각한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이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현재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국내총생산 개념으로 볼 때,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왔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30%이하로 떨어져 있다. 내각산하의 민수경제(民需經濟) 부문을 의미하는 제1경제 분야는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부족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순환구조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 공급체계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장 가동률의 저하로 국영상점의 상품이 고갈됨으로써 상품 공급체계가 무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요-공급의 현격한 불일치가 생겨나고, 그 결과 암시장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또한 암시장의 높은 물가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로 받는 월급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사정은 좀처럼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급사정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수해까지 겹쳐서 배급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다. 북한지도부는 지난 수년간 식량문제 해결을 최대 현안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 (1997년), '강행군' (1998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민들을 독려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주민생활은 중국과 미국 등 외부의 경제지원에 의존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극심한 경제난은 자연스럽게 북한 동원체제의 기강을 흔드는 체제 이완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는 체제를 부정하는 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도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직업동맹·청년동맹 등 근로단체들의 조직생활도 느슨해지고 있다.

또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개인숭배체제도 동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가정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경배의식이 겉치레에 그치거나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비밀스럽게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방식과 그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지닌 본질적 문제에서 연원한다. 그러나 북한위기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유일체제의 비효율성이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기존의 대외관계의 단절 등도 북한 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경제의 자원고갈현상이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북한경제의 위기가 사회적 위기를 파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정치적 동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셋째, 북한 위기의 원인에는 사회주의경제의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유일체제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되어 있음을 이해시킨다.

2.3 북한위기의 대응방식과 한계

북한정권은 체제위기를 맞이하여 경제분야에서 내부경제구조의 부분적인 변화와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군사국가와 강성대국론을 이용하여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반적인 체제위기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 개방정책은 개방의 효과를 체제 내로 이입시키기가 매우 어려워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기 어렵다. 군사국가의 추구도 군은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사회를 지킬 수는 있으나 외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들이는 경제를 희생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낸다.

북한정권은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이하여 내부경제구조의 부분적인 변화와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나 체제선전 우선의 왜곡된 투자순위를 점차 경제중심으로 정상화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1996년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에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1998년 9월에 단행된 헌법개정에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바꾸었다. 북한정권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된 상설 장마당을 묵인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식량 등 경제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정권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제한적인 개방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현재는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한 이래, 합작법 제정, 합영법 개정 등 각종 외국인 투자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하였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난 때문에 북한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개방은 중국처럼 전체사회의 구조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한된 지역이나 분야를 선택적으로 각각 고립시켜 개방함으로써,

개방이 체제내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개방의 필요성과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차단 필요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진선봉 특수경제지대와 금강산관광구역, 현재 추진 중인 서해공단 등과 같이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호 고립적인 지역들을 내부와 차단시켜 개방하는 '점분산형(點分散型)'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경제적 위기를 강하게 느끼는 반면에, 정치체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체 체제에서 경제가 약한 대신에 정치·군사부문이 강하다고 보고, 정치·군사부문의 강점을 이용하여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다른 분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체제위기로 치달는 것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김일성 사후 위기관리 방식으로 채택된 군사국가의 제도화와 강성대국을 채택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정권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군사국가를 추구해왔다. 첫째, 대내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이나 동요를 막고 체제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군사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의 봉쇄정책에 맞서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다보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군사적 위기를 강조하며 경제보다 군사가 우선이라는 주관적 논리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되어 유일한 가용자원이 군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군대를 중시해 온 북한독재체제의 관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넷째, 1998년 9월에 헌법개정과 함께 재편된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에서 김정일이 맡은 직책이 국방위원장이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은 군사국가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성대국이라는 국가상을 제시하고 있다. 강성대국은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서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된다. 북한은 강성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군사, 정치, 사상면에서는 이미 강국을 이루었으나,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 강성대국의 구호가 던지는 메시지다. 따라서 이제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성대국은 '현재적 성과'에 토대를 두고 '남

은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 북한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주고자 제시된 구호였다. 따라서 강성대국론은 비관적인 북한현실을 은폐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점분산형 개방으로 특징되는 제한적 개방 정책은 원활하게 수행된다 해도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개방의 효과를 체제 내로 이입시키기가 매우 어려워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기 어렵다. 결국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구조로 대폭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점분산형 개방을 넘어서서 체제내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군사국가의 추구를 통한 체제 안정전략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군은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사회를 지킬 수는 있으나,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들이어서 경제를 회생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일은 역시 당과 내각에서 일하는 경제 엘리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다. 따라서 군이 군사적 국방개념을 넘어서 경제방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정권의 위기대처방안을 경제, 정치 등 분야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둘째, 제한개방정책과 군사국가, 강성대국의 목적과 내용을 주지시킨다.

셋째, 북한정권의 위기대처방안이 지닌 한계를 경제, 정치 등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시킨다.

2.4 북한체제의 내구력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그 전망에 기초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4-5년 정도를 기준으로 전망할 때, 북한은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그 전망에 기초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향후 4-5년을 내다보는 단기적 전망은 현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북한체제의 단기적 전망은 이 체제가 지닌 내구력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내구력 측정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당내 권력동향

북한의 유일적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 내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제난과 맞물리면서 체제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구조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그로 인한 사회체제의 이완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의 동요조짐은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김정일의 장악 하에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나. 군부동향

북한에서 군은 초과대성장(超過大成長)해 있기 때문에, 군부의 동요가 곧장 정치권력의 급격한 변동이나 심각한 내란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체제보다 높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의 군을 유일하게 장악하는 인물이다. 북한 군부는 당분간 김정일의 유고나 주민폭동과 같은 특별한 외부적 변동이 없는 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체제의 수호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식량사정

식량난 악화는 북한이 당면한 최대의 난관이다. 식량난이 절대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체제수행능력의 마비와 체제정통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곧 주민소요와 대량 탈북을 초래하여 북한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연간 약 300만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식

량 필요량을 전제로 할 때 연간 300만톤 이상이 부족한 상태이며, 최소한의 한계수요량 450만톤 기준으로도 약 150만톤 정도가 부족하다.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북한이 식량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붕괴를 우려한 주변국가들의 지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기구의 식량지원이 현재 이러한 상황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긴장시키는 도발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대남정보차단

북한정권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남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시키면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자기체제의 우위'를 세뇌시키고 대남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체제정통성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체제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늘날 북한당국의 대남정보 차단기능은 현격히 약화되었지만, 아직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대남우월인식은 현격히 약화되었지만 그것이 남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킬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마. 종합적인 결론

북한의 상황은 현재 경제중심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붕괴 혹은 붕괴가 임박한 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4-5년정도의 단기전망이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함을 설명한다. 북한체제의 단기적 전망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정지표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종합적이며 보다 객관적인 북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장 북한붕괴와 같은 체제변동

과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게 한다.

2.5 북한의 변화가능성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영역을 넘어서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분야는 경제분야와 대외정책분야이며, 정치, 사상 면에서는 변화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변화유도란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 적개심과 호전성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향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서해공단 개발·문화예술교류 등 남북교류에 적극성을 보이는 한편 잠수정 침투, 미사일 시험발사, 강경 논설 발표 등을 통해서 종종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개방'이라는 용어에 극도의 혐오감을 내보이며,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북한이 평화와 개방으로 나온다는 의미의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실제로 북한사람들은 '변화'나 '개방'이니 하는 말들을 무척 싫어한다. 북한에서 개방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외부에서 불순한 사상과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체의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허장성세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해 왔다.

북한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경제분야이다. 김일성은 생전에 '어느 나라든지' 북한과 경제합작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김정일도 1991년에 최신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 합작의 조직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사망하기 직전의 '유혼교시'에서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방과 경제관계 확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 속에 비판적으로 보던 중국의 개방정책을 참고하여 1993년 10월에 합작법을 제정하고 1994년 1월에는 1984년 9월에 제정된 합영법을 외국인 투자가 보다 유리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유치법안을 제정하는 등 외국기업과 자본 도입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개정된 헌법에서도 경제조항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였다.

북한당국은 농업분야에서도 기존에 10-25명으로 구성되었던 분조원의 숫자를 7-8명으로 줄이고, 생산목표를 초과한 수확량은 분조성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자유 처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자라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 변의 빈터, 황무지 등을 개간해서 경작하는 비사회주의적 경작을 통제하는 대신에 묵인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저변의 초보적인 시장경제의 확산을 의미하는 장마당이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여 농산물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제거점이 되고 있다.

대외정치에서 북한은 그 동안 '철천지 원수'로 규정해왔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자신의 군사적 주권사항에 속한다고 주장해온 쟁점들도 서방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고 해결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이 영변 핵 문제 타결(1994.10.21)과 금강리 지하 핵 의혹 시설물 접근 문제 타결(1999.3),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의 미사일 발사유예 합의(1999.9) 등 일련의 대미 협상타결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들이 오랫동안 자주성 태도에 기초해서 주장해 온 군사주권을 포기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취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나 사상분야에서의 변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더딘 편이다. 사실 정치체제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북한변화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변화가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변화의 특징은 아직 수동적이며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이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영역을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변화의 의미는 이 체제의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변화와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 적개심과 호전성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향해 나오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대북정책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북한변화 유도란 북한이 적개심을 버리고 평화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 체제변화를 주장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자기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평화적 이행 음모'라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둘째, 현재 변화가 두드러진 경제와 대외정책분야에서의 변화양상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셋째, 대북정책에서 말하는 북한 변화 유도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가 아니라 그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적개심과 호전성을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향해 나오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시킨다.

2.6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전략은 1990년대 들어 방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정치·군사 차원의 당국간 접촉 및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지만,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등에는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냉전시절이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조선혁명론'이라는 공세적인 적화 전략적 관점에 기초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교적 고립, 경제난에 따른 위기는 공세적인 대남적화전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고 이들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내부정치안정의 필요, 경제적 대외관계 확대의 필요, 군사적 안전보장이라는 상호모순적인 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북한의 대남적대정책의 고수는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전통적인 적대감 유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안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국력과 생활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북한이 대남관계 개

선 대신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시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적대적 대남정책의 고수는 북한이 경제회생과 대외고립의 탈피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확장이라는 북한의 생존전략에 모순된다. 북한이 대남적대관계를 유지하면 남한과 경협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다른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한반도 안보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현재 북한은 남한 당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상대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남 적대관계만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저한 국력격차가 북한에 주는 위협을 방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주는 실용주의적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북한은 특히 군사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남한당국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적극 회피하면서도 남한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이며, 학술 문화 교류에도 응해오고 있다. 또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같은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외적 고립, 경제난, 남북한 국력격차 등은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 의미에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현재에는 오히려 남한체제의 우월성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생존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북한은 남한이 시장경제요소의 유입을 통해 자신의 내부를 붕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셋째, 우리의 포용정책과 북한의 대남실리정책이 맞아 떨어져 앞으로 북한과 사회문화 경제 차원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증대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알린다.

2.7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능력을 체제 유지와 대외협상용으로 활용하면서 경제난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경제분야에서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대응은 군사능력을 과시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난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용주의적 자세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중심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에 걸린 이해관계는 매우 크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대외경제관계 확대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결실을 얻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과 수교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구사하고 있는 협상수단은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미사일의 개발 위협이다. 북한은 이를 대미 협상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적대관계 청산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양국은 1997년 3월 준고위급회담 정례화를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핵합의 이행,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미사일 개발 중단 등 현안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일본자본의 유입이다. 북한은 북일수교시 받게 될 5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일 청구권자금의 유입과 일본자본의 북한 진출이 난관에 빠진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일관계는 그 동안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나, 1998년 9월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잠정 중단이 합의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1999년 12월에 무라야마 전총리가 이끄는 일본 초당파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한편, 탈냉전 이후 북한은 전통적인 동맹국가였던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재조정

하고 있다. 재조정의 핵심은 과거 동맹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협력관계의 설정이다. 중국과는 전통적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통적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설정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1990년대 들어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으나 북한은 아직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는 정치, 군사외교상의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함을 이해시킨다.

둘째,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간에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은 한반도에 안보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으나, 평화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셋째, 북한은 단기적으로 급박한 식량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본과 시장의 확보가 필요한데 바로 이 점이 북한의 대외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3. 통일환경의 변화

21세기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와 그것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환경이 과거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오래 전부터 냉전시대의 적대적·이분법적 도식에 입각한 관계가 해체되면서 적대적 경쟁과 선의의 경쟁, 협력의 흐름이 뒤섞여 전개되고 있다. 즉, 냉전과 탈냉전의 기류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통일문제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3.1 국제질서의 변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을 특징으로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 사이에서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은 그 동안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을 해체시키고, 세계를 탈냉전시대로 이행시켰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대결하고 분립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국제사회에는 가장 강력한 행위기준으로 경제적 국가이익과 실용주의가 부상했다.

탈냉전시대로 표현되는 오늘의 국제정세는 세계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냉전시대에는 양극구조였던 국제체계가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방과 자유무역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탈냉전시대에는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구상에는 개별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중심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이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이미 남한과 중국·소련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도래는 북한에게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었다. 특히 탈냉전이 중소분쟁의 종식과 함께 찾아옴으로써 북한은 그동안 세계냉전체제와 중소분쟁에 의존해서 입었던 혜택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동안 북한은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중소 대립속에서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전략적 환경구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이 초래한 국제질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질서 변화의 함의를 이해시킨다.

둘째,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이 북한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지 설명한다.

3.2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오늘날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대내적 도전으로 인해서 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심화되어 온 역량격차가 이제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결국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간의 역량격차라는 새로운 환경은 그 동안 남북한간에 이루어져 왔던 통일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대내적 도전으로 인해서 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현재 에너지 등 기초자원의 만성적인 부족과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자원고갈 현상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군사적 후원국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또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소멸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적대국가였던 미·일 등의 자본주의국가들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심화되어 온 역량격차가 이제는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현격해졌다. 남한 경제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공업화 정도와 그에 따른 경제력에서 남한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서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탈냉전시대에 들

어서서 남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과 북한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교차하면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현재 명목 GNP 25:1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국방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안보태세의 강화가 이루어져 현재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1999년 6월의 서해교전사태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의 자체국방력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대북 억제력은 현재 자체국방력 외에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 면에서도 남한은 냉전시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구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과 아직 외교관계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 역시 통일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의 조성을 통해서, 이를 대내적으로 정권의 안정화에 이용해 온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온 민주화가 정권의 정통성을 재고시켜 줌으로써 적어도 남한사회에서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통해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남한사회에서 민주화의 진전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통일정책추진의 폭을 넓히고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결국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간의 역량격차라는 새로운 환경은 그동안 남북한간에 이루어져 왔던 통일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우월성에 기초해서 '남조선 혁명'의 지원을 골자로 만들어진 민주기지론이라는 기존의 북한 혁명론을 용도 불능으로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서방에서는 북한붕괴론이 유포되고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통일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남북한의 체제역량의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대북 자신감을 심어준다.

둘째, 북한체제의 위기와 남북한 역량격차가 기존의 남북한간의 통일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설명한다.

3.3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탈냉전의 세계사적인 추세 속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실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냉전해체의 비동시적 진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인 추세 속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실은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냉전해체의 비동시적(非同時的) 진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 냉전해체의 비동시적 진행이란 세계 수준과 동북아 수준, 한반도 수준의 냉전해체가 시간상 차이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이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수준에서 냉전해체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시아 수준의 냉전도 역시 꾸준히 해체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미 지역평화의 정착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가 아직 적대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긴장의 한 축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수교에 이르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곡질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이 지역의 안보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경쟁이 불가능해지자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대남관계도 직접·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상 목적으로 사용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권력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자기체제를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려는 화평연변(和平演變)식 체제변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며, 미국도 중국의 성장과 팽창에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신을 초강대국으로 하여 지역의 강대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초다강제(一超多强制)의 국제질서를 동북아에서도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과 그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잠재적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간의 잠재적 갈등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이 국내자원의 고갈 속에서 생존의 한 방편으로 남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면서 대남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날 남북한 간의 적대적인 갈등이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했던 시대보다 주변강대국의 이익에 유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비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군사적 불안정상태를 이해시킨다. 특히 한반도가 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중시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적대적 갈등이 탈냉전시대에 남북한 모두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 이해시킨다

3.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와 도전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우리가 민족공동의 손실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이해서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으로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군사동맹국들과의 관계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의 내부경제자원 고갈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관계 없이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전쟁을 피해서 통일의 길에 이른다면, 결국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통일환경은 이러한 기회요인 못지 않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즉, 우리는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나서야 하며, 미·중간의 권력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으로 군사적 위협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결국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우리가 민족공동의 손실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양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안된다는 점이다. 즉, 험난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제 남북이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해주체로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현재 통일의 길에 놓여진 위협과 기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우리가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변화된 통일환경에 우리가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임을 이해시킨다.

4.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4.1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인 한반도 냉전구조는 하나의 공고한 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네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다. 이 냉전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며, 행위자간에는 적대성·상호불신·동맹성·배제성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으로 접어들었지만,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경제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남북한은 아직도 이념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1945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과 주변 4강 관계가 뒤엎히지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인 이 냉전구조는 하나의 공고한 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제1층위는 남북한과 주변4강이 교차하는 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로 부른다. 이 구조는 탈냉전의 추세와 교차하면서 상대적으로 준냉전적(準冷戰的) 성격을 지닌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핵 동결 문제, 북한미사일 시험발사, 북미·북일 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의 상징적 이슈이다.

이밖에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관계라는 냉전의 띠와 이를 축으로 하는 남한내부 구조, 북한 내부구조 등 3개 층위를 더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국제적 차원의 냉전구조보다 완고한 냉전적 성격을 지닌다. 즉, 탈냉전의 보편적 추세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에서도 북한내부에 형성된 냉전구조가 가장 완고하며, 남북관계도 여전히 공고한 냉전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남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냉전구조는 상대적으로 탈냉전의 추세와 뒤엎히면서 완만하게 해체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그런데 이 냉전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두개로 나뉘어져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간에는 적대성·상호불신·동맹성·배제성 등

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구조 내에 엄존하는 적대적 남북관계, 북·미, 북·일 관계의 적대성, 남한의 대북 적개심과 불신, 북한의 대미·대남 적개심과 불신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냉전구조에 기반한 행위주체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한은 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북한 핵문제로 인해 실제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몇 차례 더 안보위기가 발생했다. 1994년 전반기에 북한 핵문제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직진의 위기에까지 내몰렸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접근 문제와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의 내용과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가 존재함으로써 남북관계, 북미, 북일관계 등 전반적인 한반도정세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설명한다.

4.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이 구조 내 행위주체들간의 상호 적대성과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각국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은 양자관계 및 내부사회에서 새로운 신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안보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외교, 경제, 통상문제 등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개별 쟁점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이 구조 내 행위주체들간의 상호 적대성과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은 양자관계 및 내부사회에서 새로운 신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① 남북관계 개선

②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③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④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 및 군비통제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하여 현재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과 주변국가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위기에 대처해서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용자원인 군사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핵과 미사일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위협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나,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한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남한과 미, 일의 태도도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은 좌시하지 않지만,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우며, 경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시험발사·수출 중단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은 체제유지보장(곧, 북·미수교)과 대량살상 무기개발 억제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 확연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을 확실히 하면 체제유지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며, 경제적 보상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도덕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이미 핵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해서 동결되었으며,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먼저 북미평화협정을 통해서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미사일산업을 포기하고 자주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풀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문제 해결방식을 지향하면서, 이와 관련한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제 등 상정 가능한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에 기초한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한·미·일 공동정책으로 자리

를 잡았으며 그 내용은 1999년 9월 발표된 미국의 페리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지시킨다.

둘째, 포괄적 접근은 한.미.일 정책조정외 토대 위에서 작성되었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한.미.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물질적 보상, 북한체제 보장, 대외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협상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넷째, 포괄적 접근이 성공하려면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 내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보수적 여론을 설득하고 국내적 합의기반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4.3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변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통일은 동북아 4강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변국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주변국이 반대할 수 없도록 명분을 꾸준히 축적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 4개국과의 협력에서 특히 중요한 나라는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동북아에서도

유일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공유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북·일 수교시 지불해야 할 대일청구권 자금 때문에 향후 북한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정을 위해 중국의 협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후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현 정전체제의 준수, 남북대화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공유해 왔다.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기초로 우리는 양국간의 예상될 수 있는 이견을 좁혀 나가며 항상 중국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러시아도 소연방 해체 이후 초강대국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군사대국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일각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변국가들과의 국제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조는 항상 우리의 국가이익이 수호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주변국가에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해서 국제협조가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둘째, 주변국들은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을 이해시킨다.

셋째,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입장에서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이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5.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현재 정부는 통일정책이라는 말보다는 대북정책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북정책은 직접 북한을 상대로 하여 전개되는 정책을 뜻하는 것이며, 통일정책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통일정책이 통일 전과정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면, 대북정책은 통일로 가기 위해서 특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정책에는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정책이나 외교정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우선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당면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지난한 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며, 이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이 적대성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다. 바로 이 공존의 틀을 만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려는 정책이 대북포용정책인 것이다.

5.1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대북포용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 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대북포용정책은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포용정책은 영어권에서는 ‘Engagement Policy’ 혹은 ‘Sunshine Policy’ 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陽光政策’, 일본에서는 ‘太陽政策’ 이라고 부른다.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

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안보태세의 강화를 통해서 실현되며, 평화정착은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달성된다. 즉, 이 정책은 새로운 세계정세와 국내외 조건을 감안하여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현상유지 과제와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개입하고 관여하여 북한이 평화공존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힘의 뒷받침이 없는 나약한 유화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포용정책은 국력의 우위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억제력에 기초한 강자의 정책이다. 즉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확신과 자신감에 기초하여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Flexible Policy)」라고 하겠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포용정책이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에 바탕을 둔 화해협력정책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포용정책이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정책임을 주지시킨다.

5.2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원칙과 기초

대북 포용정책은 추진원칙으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등 3대 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추진기조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 및 평화교류의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변화 유도, △남북상호이익 도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제시한다.

대북포용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토대를 튼튼히 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이는 안보태세를 확

립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의 분명한 표시라 할 수 있고, 서해 교전사태에서 입증된 바 있다.

둘째, 흡수통일 배제이다.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 할 의사가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반세기만에 걸친 적대와 반목으로 상호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일방적·급진적 통일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분단이후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이상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추진기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안보와 협력은 두 개의 기본 축이다.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이다.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시간을 두고 달성하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셋째,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이다. 북한의 비합리적 태도에 대해서는 의연하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남북간에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되며, 서로간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의 국제적 지지 확보이다. 남북한 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도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이다.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포용정책이 전쟁재발을 방지하면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감으로서 실질적인 통일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둘째, 호전적인 대남적대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기 위해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북한의 의지를 선의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이 모순되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즉 적대적 관계의 '안보'와 동반자적 관계의 '협력'의 병행추진이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남북협력이 강화될수록 안보상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3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전면적 이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즉, 포용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들이 성실히 준수되는 남북관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정책은 역대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일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

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등 3개의 부속합의서'의 발효에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들은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3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통일문제의 민족내부적 해결의 경로를 밝힌 전범(典範)이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전면적 이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기본합의 내용들이 성실히 준수되는 남북관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군사적으로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가 실현되며,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제관계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주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북포용정책이 추구하는 당면목표와 일치한다.

이렇듯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3대 추진원칙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핵심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무력도발 불용은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규정한 제2장 남북불가침에 대한 실천의지를 나타낸다. 흡수통일배제는 상대방 체제 인정과 상대방 내부문제 불개입, 상대방 체제의 파괴전복 행위 금지를 규정한 제1장 남북화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준수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화해협력의 실천은 제1장 남북화해와 제3장 교류협력의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대북 포용정책 추진의 역사적 당위성과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이 일방적으로 역대정권의 대북정책과 결별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역대정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인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포용정책의 당면목표인 남북한 평화정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둘째, 포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밀접한 연관성은, 이 정책이 여러 차원에서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과 차이를 보이거나, 근본적으로 역대정부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5.4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방향

현재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①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③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④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⑤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⑥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의 추구

남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를 향한 진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의 약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여기서 상호불신과 적대감의 약화를 가능케 하려면 근본적으로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보다 많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광범한 민간교류도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불신을 씻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교류도 남북관계개선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민간 차원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실현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촉진하여 필연적으로 당국자간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국자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익의 확대를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실질적인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원리의 효용성을 인식시키고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려면 남북 당국간에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남북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경분리에 기초해서 우선 민간 교류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경분리는 남북관계에서 정부관계와 민간 관계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다차원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접촉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전략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결 지원

현재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과 상당수의 아사자 발생은 결코 소문이나 과장된 선전으로 넘길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남북 농업개발 협력도 병행해 나간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상당수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 하거나 고령화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남북한의 호혜적 관계 구축은 그 자체로도 남북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쌍방의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일방적이며 시혜적인 지원으로는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정부간 대화를 통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서만 호혜적 관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주의적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공존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협력과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안내도(road map)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 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남북간의 이 합의를 복원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존과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이념 및 체제의 차이,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실천이 용이하고 상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부터 실천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군비통제를 실천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에 군사정보의 교환과 군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에 대비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적통전화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6대 추진방향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주지시킨다.

둘째, 남북한의 광범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 이질화를 극복하며 이해증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재창조에 크게 기여하게 됨을 설명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한다.

5.5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대북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민주 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현된다.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건실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포용정책도 이러한 기초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민주역량의 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감정을 부추켜 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은 대북정책 수행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 매사에 흥분하기 보다는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뒤, 가장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은 대북자신감에 기초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춘 탈냉전 지향의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냉전 고수적인 북한에게 냉전적인 대북정책은 결코 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세계적 추세인 탈냉전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이야말로 냉전의 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탈냉전이 진행되는 외부세계로 조금씩 발을 내미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첫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국가안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 둘째, 포용정책이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임을 주지시킨다.
- 셋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에서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포용정책의 안보관임을 강조한다.

6. 통일한국의 실현

6.1 분단국 통일의 교훈

분단국의 통일경험은 통일이전에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가,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통일이후에는 민족의 내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교훈으로 주고 있다.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상이했으나, 그들의 통일경험이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첫째,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국가들은 기존의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꾸준히 노력했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방간에 상호 적응하는 협상과정을 지속해 나갔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비록 동독의 체제 붕괴에 따라 서독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했지만 그 이전부터 양측은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에 양측은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였다. 동서독이 1973년 유엔에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 교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상의 동질화를 추진해 나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독과정은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많은 부담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난 50여 년과 오늘날 소모되고 있는 분단비용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은 오

히려 적게 들 수 있으며 생산적 투자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단계에서 민족통합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은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통합은 내면적으로 민족구성원들의 가치관, 생활양식, 물질적 조건 등을 동질적인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완전한 통일국가의 실현은 동질적 민족통합이 수반될 때 가능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우선 베트남의 경우 구소련이나 중국 등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멘의 통일협상에서도 아랍동맹이 협정체결을 유도해 나갔다. 그리고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구소련의 불개입정책은 실제로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 이후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일이전에라도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이해시킨다. 평화, 교류와 협력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킨다.

둘째,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단된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두 부분이 다시 하나로 동질화되어가고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인식시킨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제도적 통일을 통해 국가를 합치는 것보다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 것이 더 많은 기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임을 이해시킨다.

6.2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남북간의 교류협력, 남한의 민주화과정 등은 통일의 촉진요인인 반면 북한의 지속적 대남적대 전략과 상호불신, 이질화 현상 등은 통일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촉진요인

첫째, 국제환경면에서 볼 때 탈냉전의 세계사적 추세는 거시적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탈냉전의 세계는 비록 복잡한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국가간에 개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대결과 갈등을 축소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분단이 냉전의 산물인 만큼 한반도 주변상황의 탈냉전화는 분단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주변국가들의 대북 관계개선은 남북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북한사회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의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넷째,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그들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만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섯째, 남한의 민주화의 성숙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신장은 대북·통일정책 결정의 개방화를 가능케 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통일의 장애요인

첫째, 북한의 변치 않는 대남적대전략은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비록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공존과 협력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기본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이질화현상이다. 남한사회가 민주화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는 반면 북한사회는 여전히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차이에 의한 이질화의 심화는 결국 남북통합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셋째, 남한사회내의 정치사회적 개혁 미비와 소모적 분열도 통일의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면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체제에 대해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일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개혁미비로 인한 우리 사회내부의 소모적 갈등은 사회적 합의기반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내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분열과 대립현상도 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구조가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는 현상변화 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며 주변국들이 현상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통일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개혁과 번영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매력을 상승시키며, 남북관계 및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총체적 관리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6.3 통일의 경로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 정착을 실현하여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한 간의 갈등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전면 이행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

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이 과정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남북한은 분단을 완전히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양 체제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은 우리가 목적 의식적으로 준비해 온 통일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통일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에서는 양 체제가 평화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단일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길로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이라는 두 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그 동안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연방제를 주장해왔으며, 남한은 상호주권이 보장되는 국가연합을 주장해왔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방안은 명백히 서로 대조되는 통일모형이다. 연방은 민족공동체를 향한 강한 구심력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연합은 상대적으로 이 구심력의 조절통제에 주안점을 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나 남북한 정세를 살펴볼 때, 국가연합이 이론적으로나 실현성으로나 훨씬 설득력이 높은 과도기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의 경우 비현실적이며 위험성이 높은 방안이다. 연방제가 지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가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① 두개의 적대 상태에 있는 서로 다른 체제가 어떻게 곧장 주권을 장악한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자신의 주권을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남북한 정부가 서로 높은 수준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적어도 서로 흡수되지 않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② 경제력과 민주적인 삶에서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실에서 적대적으로 경쟁해 온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연방으로 통합할 경우 과연 공존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합에 비해서 양 체제간의 통합강도가 훨씬 강한 연방제가 실현될 경우, 그것이 체제통합의 첫걸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양상의 체제통합을 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족적 구심력이 강한 우리민족의 특성으로 볼 때, 곧 연방체제를 붕괴시킬 단일민족공동체 형성을 향한 구심화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경우 통합의 구심력은 경제력이 될 것이며, 결

과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③ 연방제는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내놓았으며, 통일환경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관성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이 방안을 북한의 공산화전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변화된 통일환경 아래서는 북한이 연방제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 데도, 그들은 남한이 이 방안에 무조건적인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이 평화정착을 실현한 뒤에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상호주권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통합력이 낮은 국가연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연합조차도 현재의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미래의 일이며, 당면한 과제는 국가연합을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적대적인 정치, 군사, 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남북이 어떠한 결합을 약속한다 해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설령 성사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결과 반목을 재생산하는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국가연합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그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관계에서 기존의 적대적 성격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한은 연합단계로 진입을 논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기본합의 내용들이 성실히 준수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상태가 바로 개별 독립국가인 남북한이 연합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때일 것이다. 연합국가 속에서 남북이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 결국 온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된 단일민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우리에게 통일은 현재의 적대적인 대결상태 →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국가연합의 실현 → 단일민족국가형성의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주지시킨다.

둘째, 단일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가 지닌 무모성과 국가연합이 지닌 합리성을 대조하여 설명한다.

6.4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감과 생활격차를 극복하며,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통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전에라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과 생활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이전에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직후에는 아직도 남북한 사이에는 지난 반세기 분단의 유산으로서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자유’란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는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크게 신장되어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고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엄성’이란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고 법 질서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통일한국 구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 한국의 실현을 이루고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실화를 높이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세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가꾸어 주변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북한도 동참하도록 부단히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게 한다.

둘째, 우리 각자가 통일 사회의 주역임을 환기시켜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니도록 일깨워준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주인이며 일꾼이라는 건전한 의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7.1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현재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완화함으로써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민족이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형성하는 인간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지만, 지난 50여년 간 이어져 온 분단은 두 개의 국가체제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간의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체성을 소멸시킬 지도 모르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보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해외동포들도 참여시켜 전체 한민족공동체 형성노력과 결부되어야 한다.

분단과 갈등 상태에서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민족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행사를 마련하며, 비록 현재는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앞으로 화해 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방향으로 남북한의 갈등을 풀어 나가하고자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상호 의사소통과 남북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정당성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권과의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고통을 완화하며 그들의 생활고를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의 자신감과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북한 당국 및 주민과 접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분단과 적대 상태에서도 민족의 동질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민족의 동질성 보존 없이는 국가통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둘째,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볼 때, 앞으로 남북한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시켜, 비록 국가는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상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족공동체의 단계적 복원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7.2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우리 내부에 혼란과 실패가 있을 때 남북한의 통일은 어려워진다. 우리가 정치적 인정 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민주복지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체제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통일준비이다.

남북한 통일은 단 한 번의 조치나 한 차례의 성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간의 민족적 이질성이 심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보존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공동체를 다시 건설해 가는 수많은 작은 조치들이 쌓여 한 걸음씩 통일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재통합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여건으로 볼 때, 남북한의 민족과 국가의 재통합 과정에서 남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통합에 소요되는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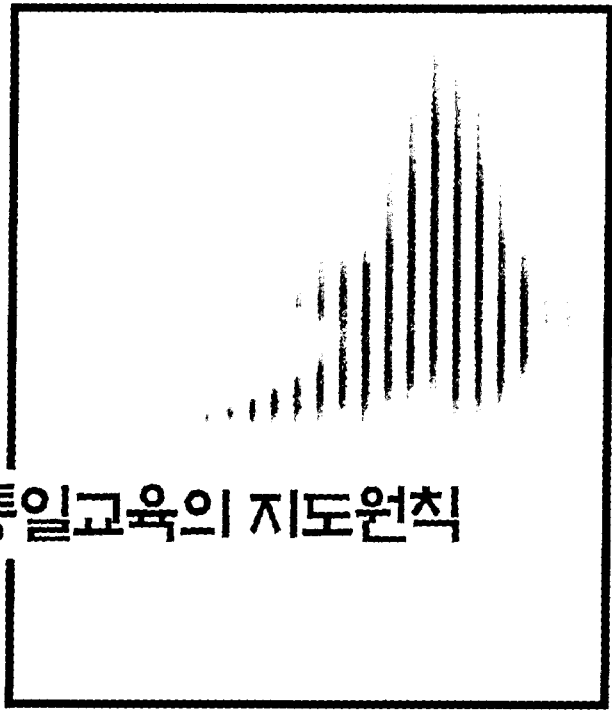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내부적으로 탄탄한 안정성을 갖추게 될 때 남북한의 민족과 국가의 재통합이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남한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그 분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 규칙과 제도가 침해된다면, 그보다 결코 쉽지 않을 문제인 남북한 통일의 과제를 거론하기는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우리는 내부적으로 남북한간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현재의 여건상 통일비용은 남한이 대부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킨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때, 북한체제의 자발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의 동의하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둘째, 우리 사회에도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민주주의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소모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성과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발전이 필수적임을 알린다.



III.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통일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 및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 지도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제껏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교육 실행을 위한 지도 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 원칙

1.1 객관적 사실의 전달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새 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는 분단의 현실, 북한의 실상, 통일 문제에 대한 신뢰성 있고 공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그 동안 우리의 통일교육 내용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점은 특히 '북한의 실상'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 김일성 및 김정일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다보니, 학습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에는 마땅히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일탈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혹시라도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북한 주민 전체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민주화 열망을 초래하기보다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 북한의 현실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 부정적인 측면이나 단점만을 들추어내려는 시도에 치우치다 보면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상당한 이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할 경우, 그러한 기준으로 북한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간과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접근이 요청된다. 새 시대의 통일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 상호간의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이 아닌 남북한의 상호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과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은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큰 과정이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정

확한 이해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분단 과정과 분단 체제의 문제점,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및 이질화 실상, 북한의 현실, 분단국의 통일 사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예상적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제시·전달해 주어야 한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학습자관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학습자관(學習者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학습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지식과 신념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및 북한 주민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객관적·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의 제시·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이 북한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된 정보들은 학습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1.2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안보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자칫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통일교육에서 안보를 강조하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교육 주체가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교육 주체의 자율성 인정 및 지도자 역할 강조

통일교육을 안보 중심의 통일 논의만으로 이끌 경우 교육자와 학습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게 되고, 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통제하게 된다. 그 결과는 정부의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교육에서 교육 주체의 자율적인 통일 논의를 인정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토의 수업의 가치와 활용

토의는 어느 안건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서, 단순한 대화로 볼 수도 있으나 좀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토의 수업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수업 모형으로, 어떤 정해진 한 가지 절차만으로 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 수업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우는 일단의 모든 수업 과정 곧, 교사와 학생간의 일문 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의미이다.

학습 방법으로서의 토의 수업 방법은 집단 성원간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의사의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토의 수업 방법은 아래와 같은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통일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협동적인 기술 및 태도를 익힐 수 있다.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수용감, 소속감, 연대의식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멤버십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타인의 의사 존중, 타인의 의사 경청, 타인과의 합의, 선입견과 편견의 수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책무성 등과 같은 민주적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그러므로 토의 방법은 통일교육의 과제 가운데 통일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의 배양,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에 특히 유용한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의 수업은 강의 수업이나 시청각 교육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강의를 위주로 하되, 일문 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립 토의 등을 가미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제를 학습자가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토의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일 관련 수업을 할 경우, 성향이 다른 견해를 표방하는 정기 간행물,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통일 관련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 사회 단체의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은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조를 수록·분석하고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3 각종 교육 기법의 활용

토의 수업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비 토의, 직소우, 구조화된 논쟁, 집단 탐구, 디스코그 래피, PMR,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등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두뇌 폭풍이라는 말뜻 그대로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해 두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놓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게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이질화가 심해졌다고 한다. 이런 이질화의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을까?’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지켜져야 할 규칙들이 있다. 첫째, 농담을 제외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수용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넷째,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나 의견을 끌어내야 하고, 유도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으로 생각하되 질보다는 우선 양에 관심을 가진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양을 추구하는 것은 양이 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며, 양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아주 유용하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는 또 다른 토의의 대상이 된다. 브레인스토밍 토의가 끝나면 교사는 우선 모든 아이디어들을 평가해야 하며,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비 토의(analogy discussion)

통일교육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의 방법으로 비유를 활용한 유비 토의를 실행할 수 있다. 유비를 찾아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들은 앞에서 언급한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유비를 만들어내는 과제들을 소집단에게 부여하여 소집단 토의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비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북한 정권과 선인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민족과 발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통일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통일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북한의 대남 정책을 붉은 장미에 비유한다면?’, ‘북한의 핵 개발을 두더지에 비유한다면?’ 등.

유비 토의의 장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통일 문제의 성격을 다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직소우(Jigsaw)

이 모형은 5~6명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고, 학습할 단원을 집단의 수에 맞게 나눈 후,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한 부분씩 학습할 부분을 나누어준다. 각 집단에서 같은 부분의 내용을 학습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전문가팀을 이루어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학습한 후에, 다시 자신이 속한 원래의 집단(홈팀)으로 돌아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전문가팀에서 토의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토의 방법은 협력적 과제 해결의 능력을 신장시켜 줌과 동시에 긍정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교육자는 이러한 직소우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육자는 학습 과제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5명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한다. 원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교사는 이러한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학습 과제를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각 팀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운데 하나의 학습 과제를 부여받아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하게 된다.

개별적인 탐구 활동이 끝난 후에, 교육자는 북한의 정치를 탐구한 학습자들만이 모이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준다. 학습 주제가 다섯 가지이므로 모두 다섯 개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들을 토의하여 보다 완벽하게 학습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어느 정도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다시 원래의 소속 집단(모집단)으로 돌아가게 한다.

모집단에 돌아온 학습자들은 전문가팀에서 심층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들이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가 되며, 학습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

이 방법은 토의 절차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두 개의 반대되는 의

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 팀이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팀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것이다. 형식에 따른 논쟁 토의가 끝난 후 청중과의 일반적인 토의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 산발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논쟁거리를 이용한 수업의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제 부여** : 교사는 네 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한다. 4명 가운데 2명은 찬성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명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는 경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 **계획** : 첫 시간에 교사는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각각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 및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집단에서 2명이 다른 2명을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찬성 의견을 가진 2명과 반대 의견을 가진 2명은 서로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찾아야만 한다.
- **변호** : 두 번째 시간에 교사는 2인 1조로 된 각 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는 전체 토론에 참여하여, 대북 경제 지원의 계속 여부에 대한 최상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입장 교환** : 세 번째 시간에 각 팀은 서로 입장을 바꾼다. 처음에 반대했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찬성 입장을 받아보는 것이다.
- **합의 도출** : 네 번째 시간에 4인으로 구성된 각 집단은 그들이 보기에 양측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 가운데 최상의 정보와 추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의 합의된 해결 방안으로 종합한다. 그리고 나서 집단의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활동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첫 시간에는 과제 부여·계획·변호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입장 교환과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구조화된 논쟁을 이용한 토의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육자는 학습자

들이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잘 지키게 해야 한다 : ① 나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 비판적이다. ② 나는 논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상의 결정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나는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도록 고무시켜 준다. ④ 비록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한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귀담아 듣는다. ⑤ 나는 어떤 학습자가 말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한다. ⑥ 나는 처음에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든 생각들과 사실들을 분명히 하며, 그 후에 그것들을 수궁이 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한다. ⑦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두 입장들을 모두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⑧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나의 생각을 바꾼다.

구조화된 논쟁은 교육자가 동일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한편으로 기울게 만드는 편견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

집단 탐구 수업 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들이 학문적 사실이나 법칙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것을 발견하는 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② 학습자들이 흥미 있는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때, 지적 탐구의 호기심이 유발된다. ③ 집단 문제 해결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토의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집단 문제 해결 학습 과정에 참여하면 타인과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게 된다. ⑤ 학습자들은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만 한다.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집단 탐구를 활용하는 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의 제시와 탐구 문제 설정** : 교사는 집단 탐구를 실행하기 1-2주 전에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곧 학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북한의 실상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학습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북한의 실상에 관해 다루는 첫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이 북한에 관하여 탐구하기를 원하는 학습 주제들을 선정하게 한다.

- **탐구 계획 수립** : 교사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몇 개의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편성하여 탐구 집단을 구성하게 한다. 탐구 집단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구성원들간에 서로가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각 집단은 자기 집단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할 주제를 세분화하고, 각 탐구 질문에 필요한 자원의 출처를 논의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각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할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집단이 북한의 경제에 대하여 탐구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그 집단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탐구 과제, 즉 북한의 식량 생산 실태, 북한의 천연 재해 실태, 북한의 농업 기계화 실태, 계획 경제의 문제점, 북한의 군사비 지출 현황 등을 설정하게 된다.
- **탐구 활동의 전개** : 세부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탐구는 학습자들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만,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탐구 활동을 수행해 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탐구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즉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탐구 결과의 정리 및 발표** : 탐구 활동을 마치고 나면 학습자들은 그들의 탐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소집단을 통한 탐구 결과를 전체 학급 학습자들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 학습자들은 인터뷰 자료, 슬라이드, 차트, 파워포인트, 사진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발표를 하게 된다.
-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 : 탐구 활동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은 탐구 경험을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 때 교육자는 소집단 보고서를 편집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전체 학급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게 할 수도 있다.

집단 탐구는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넓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탐구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해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정보와 아이디어의 수시 교환에 있어서 동료와 상호 작용하는 기회를 극대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

디스코그래피는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중 1·4후퇴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때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 테이프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와 단원의 주제를 연결시켜 토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녹음 테이프 자료만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응용하여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식량난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보여줄 수 있다. 디스코그래피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나 핵심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녹음 테이프 자료나 비디오 테이프 및 영화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PMR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 각각을 비교 분석한 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다.

한 예로, 대북 쌀 지원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효과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인터넷과 현장 방문을 통해 통일부나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수집·정리한 자료(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북 쌀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토론했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 팜플렛, 다양한 책자 등에 나오는 광고나 만화 중 도덕과 수업과 관련이 깊은 것을 오리지널 복사해 영상 매체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았는지 그 이유도 말해 보게 한다. 이렇게 하여 수업의 동기 부여 및 토론의 단서를 제공해 수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기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광고나 만화의 한 컷을 보고 융통성있게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전할 수 없는 감동과 총체적 느낌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분류와 범주화, 신문 활용하기(NIE), 마인드 맵(mind-map), 녹음 테이프 활용하기(tape-recording),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보조 기법들이 통일교육을 위한 토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1.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이용법, 전자 우편 이용법, 전자 게시판 이용법, 정보 사냥 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통일교육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자는 물론 비디오, 사진, 영화, 오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 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점차 무관심 내지 냉소적 경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흥미

를 유도해 통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들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토론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에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사이버 통일토론 마당, 청소년 사이버 통일백일장 등의 문예활동 프로그램, 통일교육원의 통일 강좌를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로 활용, 통일 문제 중 특정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 통일 관련 각종 여론조사 등이 있다.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인터넷은 소장된 정보의 양이 거대하므로 인터넷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하여 교수자는 강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 능력을 배울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보 검색 이용법'의 활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강의 법이나 토론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보 검색 활동 그 자체를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교환은 주로 '전자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자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자 우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 추수 학습(follow-up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에 통일교육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 우편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통일 문제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으며,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권위에 주눅이 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전자 우편은 교육 기간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교수자의 강의를 들은 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전자 우편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 전자 우편은 학습의 개별화 및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기존의 교육 과정 속에서 전자 우편이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강의 교재에서 반드시 교수자의 전자 우편 계좌를 밝혀 주어야만 한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파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전자 게시판'은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들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다. 담당 교수진을 비롯한 학습 내용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강의나 논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자 게시판에 북한의 실상에 관한 최근의 사진이나 동영상,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소감문 등을 게시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자 게시판의 이용은 전자 우편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전자 게시판에 북한 소설을 게시해 두고 학습자로 하여금 북한 소설을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한 소감을 전자 우편을 통해 서로 교환하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실상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자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사냥 대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교수자는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인터넷의 통일 관련 사이트를 통해 해답을 찾아 전자 우편으로 교수자에게 보낸다. 또는 교수자가 미리 준비한 문제들을 학습지 형태로 학습자들에게 부과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 정답을 찾아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기능을 갖게 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평가 활동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담당 교수의 강의와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료(도표, 사진, 녹음, 비디오, 영화 등)를 CD에 담은 종합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피교육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일 교육의 대상을 각급 학생은 물론 각급 군부대를 포함한 국내 사회 전반과 해외 교포 사회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교수 1인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식 수업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이버상으로 참여시키는 협동 강의를 가능하다. 나아가 각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저서에 연결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체험 활동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인터넷 웹사이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CD-RO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별도의 CD-ROM을 만들어 북한의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도 있다.

한 예로, 북한의 가정 생활 체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시골 마을 사진을 소재로 하여 가상으로 북한 마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 북한의 한 가족을 만든다. 플레이어(player)는 그 중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중 북한의 가장이 되기를 선택하면 그 사람의 신상 명세서가 모두 소개되도록 만든다. 플레이어는 자기가 선택한 인물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즉,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했을 경우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독보회, 사상 학습, 집단 노동, 충성의 서약 등의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 플레이어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상 체험이 시작되게 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양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탈북 시도, 지배층으로 상승, 지하 운동원으로 변신, 정치범 수용소 투옥 등의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전체 학습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 토의를 실시해야 한다.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 학습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체험하는 학습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見, 百見 不如一行)”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가장 학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 내용을 모의 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학습법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정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하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민간 단체의 통일교육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 통일극’(남북 나눔 운동), ‘북한 가정의 가게부쓰기’(중앙대 민족 통합 교실), ‘탈북자 가정의 경제 생활 체험하기’(중앙대 민족 통합 교실)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생생한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통일 이후의 우리 나라 상황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로, 통일에 이르는 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로 만든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통일이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 학습자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해 내어야만 한다. 알아듣지 못할 수준의 북한 언어를 구사하는 상대방과 같이 북한 말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2단계에서 학습자는 주변 4강의 책임자들을 만나게 되고, 주변 4강의 대 한반도 정책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보게 된다. 학습자는 주변 4강의 책임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학습자는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 내야만 한다. 북한의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비 축소, 문호 개방 등의 정책을 실시해 나가야만 한다.

4단계에서 학습자는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후에 전체 학습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이에 대한 결과 토의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 체험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는 활동 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체험을 통한 통일 교육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간 사회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병행하여 현장 체험 학습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때 가장 학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귀로만 들은 정보의 20%, 눈으로 본 정보의 3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의 50%, 말한 정보의 80%, 말하고 직접 체험해 본 정도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따라서 체험 학습은 학습 과정과 기억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마음'(도덕적 민감성)을 흔드는데 이것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이다.

1.6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 방법론의 다양화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하였다. 게다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너무 치중해 온 결과,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및 자료의 개발 등 통일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통일교육의 방법론의 취약함은 이를 담당하는 교사 연수(직전 교육, 재직후 교육)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통일교육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말의 의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 유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 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습 양식 유형으로 학습자의 지각 양식 선호도에 따른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 분류를 들 수 있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 전략이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 역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한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흥미나 관심, 진로 등에 따라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s)을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되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브루너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 주장이나, 가드너의 학습자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다지능 이론이 대표적이다. 시각형 학습자는 그림 등과 함께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청각형 학습자는 강의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촉각형 학습자는 조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차별화 교육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 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 제시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 원칙

2.1 공통원칙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균형교육,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적극적 평화교육,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 그리고 생애교육이 되어야 한다.

균형교육(balanced education)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about)', '통일을 위한(for)', '통일 내의(in)' 교육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통일에 관한' 교육이란, 통일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 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을 위한' 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습자로서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 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 주는 일이 관건이 된다.

'통일 내의' 교육이란,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 속에 내재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켜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 이를테면 안보 문제, 통일 국가의 지향 이념, 통일 국가가 당면하게 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통합적인 형태로 학습되어

야 하며,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의 의사 결정자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분단 과정이나 통일 정책에 대한 무기력한 관념(inert ideas)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관념(vital ideas)을 지닌 학습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혹은 행동 지향적 교육(action-oriented education)이 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갈등의 합리적 해결 능력, 비판적·창조적 사고 능력, 협동 능력 등과 같은 민주 사회적 기능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

적극적 평화교육(positive peace education)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 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 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와 같은 사람다운 삶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소양을 높임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과 연루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은 기성 세대의 적색 공포증이나 통일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후계 세대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개발시켜 주어 그들 스스로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한다.

생애교육(lifelong education)으로서의 통일교육

학습자들이 학교에 올 때에 통일에 관하여 백지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가정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그들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학령기 교육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계속성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최근에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 기관 및 가정교육은 통일교육의 사각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가정, 유아 교육기관, 학교, 군대, 사회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테크놀로지에 바탕으로 둔 교육(technology-based education)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습자들은 문자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정보나 낡은 사진 정보를 통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의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 교육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북한 생활을 체험해 본 학습자와 교과서에 나타난 문자 정보로 북한을 이해한 학습자 사이에는 엄청난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다. 학습자들을 학습 과정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학습 활동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만 한다.

2.2 학교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유의미성 중시, 학생의 일상적 질문과 호기심의 존중,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과제 해결시 협동의 기회 부여, 학습 보조 도구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활발하고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 제고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the quality of empowered teachers)에 달려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통일교육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는 언제나 통일교육에 대하여 역량 있는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도 통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교육투자(教育投資)'라는 생각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도 원칙을 중시한다.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 존중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새로 배우는 학습 내용이 학생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해 주고, 그들의 관심사나 가치와도 관련이 되고, 그

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학생들은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는 제시되는 학습 내용이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 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적 발달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적 흥미를 중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때에 교사는 그런 질문이 수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중시하는 학습 활동을 구조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최근의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 및 인구 동태, 천연 재해, 북한 식량 생산 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자료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아이디어(big idea)를 중심으로 학습을 구조화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커다란 아이디어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 실상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되고 제한된 정보 속에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해 주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협동적인 학습은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 시민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고,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공감, 역할채택, 책임, 갈등의 합리적 해결, 비판적·창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태도들은 북한 동포를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여러 주장이나 견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급적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사회적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동적인 학습 과제의 제시는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절충·타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된 확고한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사들은 학생들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탐색적·민주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실 환경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관점이 폭넓게 모색·논의되어진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모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하나의 있음직한 가설이나 추론으로 존중되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

시켜 주어야 한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학습 보조 도구의 다양한 활용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 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학습 보조 수단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하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시켜 준다. 또한, 학습 보조 수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며, 학습을 쉽게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하며, 전이를 돕고, 가르치는 일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 수단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적절한 실천 기회 부여

통일교육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통일 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 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연해 보게 하거나, 남북한의 신문이나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단어이면서도 남북한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는 창조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해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북한 주민들을 동포애로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도서,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 단체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된다.

2.3 사회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강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강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동료 집단과 상호 작용 및 협동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관별·성별·세대별로 특화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중시 _____

사회통일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성인 수강자는 아동에 비하여 많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수강자라는 역할 이외에도 부모, 직장인, 시민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인이다. 수강자이기 이전에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도 스스로 그 상황을 조절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즉, 성인들은 스스로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지각된 역할을 수행하는 수강자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습 목표 및 내용들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수강자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며, 교육자는 지식의 제공자가 아닌 학습 환경에의 또 다른 참여자로서 존재하도록 한다.

수강자의 생활 세계와 구체적으로 연계

수강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수강자들의 경험은 곧 학습의 자원이 되어 그들의 지각과 학습 기대에의 근간이 된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은 학습 자원으로써 성인들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수강자가 보다 쉽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수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수강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수업은 곧 성인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자는 성인 수강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특정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안내하여 수강자가 자아 성취를 하도록 돕는다. 이렇듯 수강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 실험 환경을 마련하며, 상황극과 역할극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수용 능력 신장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습을 미래에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는 반면, 성인 수강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인지한다. 즉, 그들의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관련있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수강자에게는 교육자의 가르침보다는 수강자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나 학습 후에 공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 스스로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사와 교과서 등이 권위를 가지며 시간표 등에 의한 형식적인 체제가 성립되어 있다. 반면, 사회교육에서는 중심 권위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교육자와 수강자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비교적 자유로운 비형식적 체제가 성립되어 수강자에게 편리한 시간 위주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인 수강자에게는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합의를 이룬 통일 교육 교재를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만, 사회교육에서는 성인 수강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합의를 이룬 통일교육 교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상이한 관점의 통일교육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스스로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 제공

사회통일교육은 지도자(leader)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사회교육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토론의 주제 발표자, 토론의 사회자, 조장 등 그룹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수강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자는 학교급·학년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자는 기관별·성별·세대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이들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특화(特化)된 교육 자료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가능한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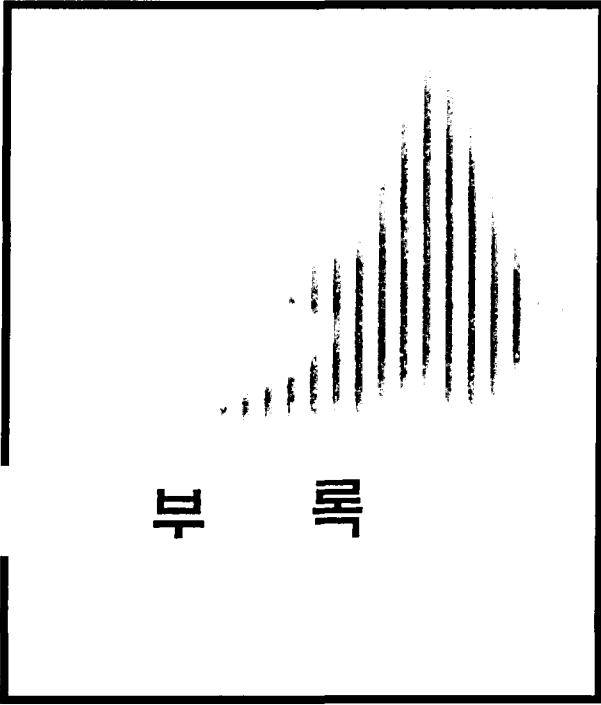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직업을 고려하여 수강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북한의 생활 경제', '북한의 직업' 등과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직업 훈련 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

업생활을 포함하는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직업생활에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경제의 문제점, 남북한의 직업 생활, 통일 이후 직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구성한다.

교육 종료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제고

학교통일교육이 정해진 교육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교육 시기의 상한선이 없다.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자는 전생애에 걸쳐 언제나 교육의 대상이 된다.

생애교육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통일교육은 교육 종료 후에도 성인 수강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 시간 통일교육 전문기관에서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체험을 위한 현장 견학(금강산, 통일 전망대, 전쟁 기념관, 판문점, 땅굴 등),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1999. 8. 6.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1999. 8. 6.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 · 법무부차관 · 국방부차관 · 행정자치부차관 · 교육부차관 · 문화관광부차관 · 노동부차관 · 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분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31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현장통일교육안내

판문점

1. 개요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서, 현재는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교육장이기도 하다.

2. 관람신청 및 접수

가. 내국인

○ 자격

- 만 10세 이상인자로서
- 15명이상 53명이하 단체로서 신원조회시 결격자가 아닐 것

○ 구비서류 : 신청서, 방문자명단, 신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 및 문의 : 국가정보원 지역 대공상담소(080-999-1113)

※ 서울 및 수도권 : (02) 273-1114~7, 서울 중구청내

※ 공무원, 중·고등학생, 교직원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02-735-4845)에 신청

나. 외국인

○ 여권소지자

○ 관람신청 : 대한여행사(02-777-6647), 중앙고속(02-2266-3350) 대행

3. 기타

- 방문희망일 60일 이전 신청가능
- 방문일정 확정 후에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단정한 복장 착용(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노출이 심한 의상, 슬리퍼 금지)

오두산통일전망대

1. 개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 임진강의 좁은 강폭(460m) 하나만으로 남북한의 땅과 사람이 상호 마주하여 반세기 동안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한 분단의 현장으로,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의 9,000여명의 주민과 농민의 농사짓는 모습, 군사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각종 전시자료는 물론, 최신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의 모습을 감상 할 수 있는 북한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2. 관람안내

가. 관람시간

- 하계(3월~11월) : 오전 9시 - 오후 6시
 - 동계(12월~2월) : 오전 9시 - 오후 5시
- ※국·공휴일엔 30분 연장됨

나. 관람내용

- 최근 북한관련 자료 및 사진전시
- 최신 북한 영상시청(2층 북한영상실)
- 망원경 조망

다. 교통편

○ 승용차 : 강북도로→자유로 / 88대로→행주대로→자유로 / 구파발→통일로→금촌
(통일동산)

○ 대중교통

- 열 차 : 경의선(서울역 → 금촌)

- 버 스 : 광화문 사거리(912번), 서부 터미널(909번), 신촌 기차역(999번), 시외버
스(완행:158-2번) → 금촌하차

마. 안내전화 : (0348) 945-3171, 3173, 2390

도라산전망대

1. 개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원당리-땅굴)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는 송악산 OP폐쇄에 따
라 대체 설치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1987년 1월부
터 문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망가능지역은 송악산, 김일성동상, 기정동, 개성
시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2. 견학절차

가. 출입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공보실에 출입자 명단을 7일전에 신청 허가후 출입

나. 관광절차 및 신청 : 사전에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 관광가능

○ 신 청 : 재향군인회 안보관광사업부에서 대행

(연락처 : 0348-954-0303, 0640, 954-7004)

다. 출입절차

○ 개인 : 임진각에서 셔틀버스 이용

○ 단체 : 출입 3일전까지 신청, 사전예약(단체명부와 차량번호 작성)

제3땅굴

1. 개요

가. 발견일시 : 1978. 6. 10

나. 위치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문산까지의 거리 12km, 서울까지의 거리 52km)

다. 규모 : 연장 1635m, 높이 2m, 폭 2m, 깊이 73m(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35m)

라. 현황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에 위치한 제3땅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투한 땅굴로 폭 2m, 높이 2m 총 길이는 1,635m이며, 남방 한계선까지 거리는 435m로서 1시간당 완전 무장시 1만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하고 비무장시에는 3만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다.

2. 관광절차 및 신청 : 사전에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 관광가능

가. 신청 : 재향군인회 안보관광사업부에서 대행

(☎ 0348-954-0303, 0640, 954-7004)

나. 출입절차

○ 개인 : 임진각에서 셔틀버스 이용

○ 단체 : 출입 3일전까지 신청, 사전예약

통일공원

1. 개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위치한 통일공원은 육군 제1사단 근무중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장병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고혼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

한 업적을 이룩한 사단 장병들의 높은 감투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며 이를 귀감으로 삼기 위해 건립되었다.

2. 전 화 : 0348-953-0847

3. 주변관광지 : 임진각, 제3땅굴(도라전망대), 통일전망대, 반구정, 화석정

임진각

1. 개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에 위치한 임진각은 6·25전쟁 유물 및 각종 반공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자유의 다리, 철마는 달리고싶다(경의선철도 중단점), 북한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 등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2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2. 관광안내 : (주)임진각 0348-952-2565

3. 교통

가. 버스 : 909(불광동), 922번(미도파앞)-문산터미널 하차(임진각행 버스 환승)

나. 승용차

- 구파발~벽제~문산~임진각관광지(1번국도 종착점)-60분소요
-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문산~임진각관광지-40분소요

철원군 전적지

1. 개요

철원군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전적지가 많이 있어 학생 및 일반인의 현장 안보교육으로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및 명절연휴를 제외하고는 항상 관광이 가능하고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2. 전 화 : (0353) 455-3129, 3577(철의삼각전적지)

3. 주요전적지

백마고지 전적비, 노동당사, 금강산 가던 철길, 승일교, 월정역, 철의 삼각 전망대, 철의 삼각 전적관, 제2땅굴

용산 전쟁기념관

1. 개요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실증자료들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보 및 역사의식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하여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 전쟁기념관을 건립하였다.

2. 관람시간

○ 3월~10월 : 09:30-18:00

- 11월~2월 : 09:30-17: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포함된 연휴 때는 마지막 다음날 휴관)

3. 교통

- 지하철 : 삼각지역(4호선)
- 시내버스 : 전쟁기념관앞, 국방부앞, 또는 삼각지에서 하차
- 승용차 : 이태원, 반포방면에서 남문, 노량진·신촌·서울역 방면에서는 북문으로 진입

4. 전화

- 문의전화 : (02)709-3114, 3139
- 단체관람예약 : (02)709-3032, 3034

독립기념관

1. 개요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2. 관람시간

- 하절기(3월~10월) : 09:30~18:00
- 동절기(11월~2월) : 09:30~17:00
- ※ 휴관 : 매주 월요일

3. 전 화 : (0417) 560-0114

4. 교통

가. 기 차 : 천안역 앞에서 버스 이용(12Km)

나. 버 스 : 천안 터미널 앞에서 버스 이용(12Km)

다.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목천 인터체인지에서 2Km 또는 국도 21호 이용

북한관

1. 개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북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전시실 구성

- 북 한 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전시판넬, 북한주민 생활용품 전시를 통해 소개
- 통 일 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등 소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및 북한영화 상영

3. 관람안내

가. 관람시간

○ 11월~ 2월→10:00~16:00

○ 3월~10월→10:00~17:00

※ 각 지방북한관의 현지사정에 따라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개관

나.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 신청
- 개인 : 관람시간내 자유관람
- 문의전화 : 각 지방북한관 안내전화 참조

4. 위치 및 연락처

| 지역 | 위 치 | 전화번호 |
|-----|----------------------------------|-----------------|
| 오두산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 (0348) 945-3171 |
| 고 성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 (0392) 683-4438 |
| 철 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 (0353) 55-3129 |
| 임진각 |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 (0348) 52-7575 |
| 양 구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핀치볼지구내) | (0364) 481-9021 |
| 인 천 |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 (032) 868-0113 |
| 부 산 |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 (051) 808-7960 |
| 광 주 | 북구 운암동 164-1 (어린이회관내) | (062) 525-7722 |
| 경 남 |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 (0551) 82-2332 |
| 청 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 (0431) 56-5050 |
| 제 주 | 제주시 일도2동 968-29 (탐라자유회관내) | (064) 51-0191 |

북한자료센터

1. 개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연간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물품전시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과 동시에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를 정기·수시적으로 개최하여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2. 이용안내

가. 위치 및 교통편

- 광화문우체국(광화문사거리 소재) 6층
- 지하철 1호선(종각역), 2호선(시청역), 5호선(광화문역)

나. 이용시간

- 평일
 - 3월 - 10월 : 09:00 ~ 17:30
 - 11월 - 2월 : 09:00 ~ 16:30
- 토요일 : 09:00 ~ 12:00

다. 전화 : (02) 730-6658

대북정책 해설자료

| 자 료 명 | 발행기관 | 비 고 |
|------------------------------------|---------|-------------|
|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 통일부 | 책자 |
|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 " | " |
| '98 통일백서 | " | " |
| 통일문답 | " | " |
| 통일문제 이해 | " | " |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 | 팜플렛 |
|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 | " |
|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 | " |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 |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 |
| 南과 北 하나가 되는 길 | 대한매일신보사 | 책자 |
|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 밀레니엄박스 | " |
| 문답으로 풀어 본 대북포용정책 | " | " |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 | |
|-----------------------------------|--|
| 청와대 | www.bluehouse.go.kr |
| 통일부 | www.unikorea.go.kr |
| 남북회담사료 | dialogue.unikorea.go.kr |
|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
| 국가정보원 | www.nis.go.kr |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 국방부 | www.mnd.go.kr |
| 통일연구원 | www.ku.kinu.or.kr |
| 한국국방연구원 | www.kida.re.kr |
| 외교안보연구원 | www.mofat.go.kr/korean/ifans |
| 통일학연구소 | www.onekorea.org |
| 극동문제연구소 | www.members.iworld.net/ifans |
| 세종연구소 | www.sejong.org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
| 북한인명사전 | www.seoul.co.kr/north |
| 연합통신 | www.yonhapnews.co.kr |
| 통일정보신문 | www.unityinfo.co.kr |
| 코리아스코프 | www.koreascope.org |
| 통일학연구소 | www.onekorea.org |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hunger.peacenet.or.kr |
|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 www.jungto.org/gf |
| 북한나눔운동 | sharing.peacenet.or.kr |
| 북한동포의 생명과인권 지키는 시민연합 | www.nkhumanrights.or.kr |
| 유홍준의 북한문화답사기 | www.joongang.co.kr/special |
| 파주시 통일여행 | city.paju.kyonggi.kr |
| 백악관 | www.whitehouse.gov |
| 미국 CIA | www.odci.gov |
| 미의회 | www.house.gov |
| 미국방부 | www.dtic.mil/def/index.html |
| 미국무성 | www.hri.org/docs/usa.html |
| 노틸리스 | www.nautilus.org/napsnet |
| CSIS(국제전략연구소) | www.csis.org/index.html |
| HOOVER | www.hoover.stanford.edu |
| RAND연구소 | www.rand.org |
| HERITAGE재단 | www.heritage.org |
| RIIA | www.riia.org |
| SIPRI(국제평화연구소) | www.sipri.se |
|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www.fas.harvard.edu/~hoffman/dprk.html |
| 오레곤대학 북한정보서비스 | darkwing.uoregon.edu/~felsing/ceal/welcome.html |
|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www.foreignrelations.org |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행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02)3703-2341, 2342
<http://www.unikorea.go.kr>

인쇄처 (주)성림문화 ☎(02)2278-7011
인쇄일 1999년 12월 24일
발행일 1999년 12월 30일

비매품

